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조성 착수

기본계획 수립·환경영향평가 진행

강원도 철도 SOC사업의 중심축이 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27일 조달청과 도내 경제단체등에 따르면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주한 제일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해당 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용역은 크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문화재지표조사△지반조사 및 측량△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이 담긴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간은 300일이며 내년 6월 결과가 발

표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도 동시에 착수됐다. 최근 개찰된 '춘천~속초 철도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은 서울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가 수주했다. 선진은 동서고속철 조성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역시 내년 6월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본후 201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속초 노선 단선전철이 완공되면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과 함께 서울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완료된다.

안은복 rio@kado.net

【 2016.11.28(월) 건설경제 】

아하! 그렇구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한 경우

Q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한 경우 그 효력은?

A A회사는 B회사와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B회사의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정산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B회사의 가압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A회사에 송달된 후 A회사가 B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공사계약상 선급금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A회사는 공사대금 미지급액에 위 선급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점을 B회사의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B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원심이 실시한 법리에 따라 선급금과 가성공사대금의 정산이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산 또는 충당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

으나, 이 사건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A회사가 B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으로서, 가압류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고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결국 A회사는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B회사에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선고, 2014다2723).

결국 A회사는 B회사의 선급금 반환채권과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정산하였지만 B회사의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급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그 성질은 어디까지나 공사대금임을 간과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발주제도 혁신 '강드라이브'... 중심제 등 이행실적 '양호'

글 쓰는 순서
✓ <상> 건설

□ <중> 주택·도시
□ <하> 교통·미래산업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내년에 국토부가 추진할 정책 목표와 주요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하지만 내년 계획수립에 앞서 올해의 평가가 먼저다. <건설경제신문>은 건설과 주택·도시, 교통·미래산업 등 3회로 나눠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의 이행 성적을 점검 조명한다. 편집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내건 정책목표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토공간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미래 선도 등 정책의 3대 지향점도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5대 주요과제로는 △경제 활력 창출 △집 걱정 해소 △살기 좋은 생활공간 마련 △편리,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미래 준비, 업무방식 혁신 등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의 이행실적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입찰제도 와 보증제도, 기술평가방식의 개선은 비교적 잘 지켜진 반면 생산체계 혁신과 시설물 유지관리분야의 종합개선대책 등은 계획이 못 미쳤다.

국토부는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입찰제도 개선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다양한 발주제도 혁신을 시도했다. 유찰사태를 빚었던 기술형 입찰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도 현재 진행형이다.

올해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는 당초 약 10조 원 규모의 발주를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까지 102건, 8조953억원이 발주돼 이행률이 80%를 넘겼다. 이는 국토부 산하기관 외에 조달청과 국방부 등 주요 발주처를 모두 포함한 액수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낙찰률상향과 입찰참가자수 감소 등은 긍정적이지만 기술 변별력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시공분야에선 확정가격 최상설계, 순수 내역 입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시범사업, 용역분야에선 '용역판 중심제'로 불리는 국제기준의 건설엔지니어링 입·낙찰제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역대급으로 불발 만들 다양한 시도다.

확정가격 최상설계와 용역판 중심제는 첫 시범사업이 발주된 상태다. 기술변별력

**새 입찰 제도 잇단 시행대
확정가격 최상설계 등 다양한 시도
중심제 연내 10개 발주 '청신호'**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정비 저조
내년개선 근본적 대책마련 뒷전
시설물 성능평가 방식 도입 못해
건설 생산체계 혁신에도 소극적**

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보지 않고 기술력만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는 기술형 입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2개 공구와 흑산공항 건설공사에 각각 적용됐다. 다만 흑산공항에선 '박한 공사비-낮은 실행-유찰'의 악순환이 재현됐다. 용역판 중심제는 양평~이천 고속도로 3개 공구가 첫 시행대에 올랐다.

시공책임형 CM과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도 각각 다음달 중 입찰공고가 나온다. 하남 감일 B3블록 아파트 건설사업과

평택~포승 철도건설사업(2공구)이 1호 사업이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연내 발주 약속은 지켰다. 일각에선 시범사업만 잔뜩 발려놓고 수습(제도개선)은 뒤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경쟁 유도를 위한 총점차등제도 적용 대상과 차등 폭을 넓혀 시행되고 있다.

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0)을 앞둔 생산체계 혁신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려던 시도는 내년에 본격화된다.

저가공사 보증거부와 부실기업의 고액보증에 대한 심사강화를 골자로 하는 보증제도 개선은 예정대로 시행됐다. 보증발급의 기준이 되는 '저가공사 거부 낙찰률'을 올리고 고액보증 심층심사 대상을 넓혔다.

대금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금지급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지난 6월부터 가동됐고, 상습채불업자에 대한 명단공표도 11월에 첫 시행돼 위력을 발휘했다.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에 하도급·자체 동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 후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분야는 극심한 시장 침체 탓에 정책지원도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사

들이 계약한 해외건설 수주 금액은 총 233억달러(25일 기준)로 작년 같은 기간(406억달러)보다 43% 줄었다.

수주액 외에도 수주 건수(-17%)와 진출 국가(-9%), 진출 업체(-10%), 최종 진출(-9%) 등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다.

20억달러 규모의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KOIF)는 투자대상을 놓고 막판 저를 질 중이고 해외건설 경기실사지수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T/S) 지원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까다로운 자본시장법의 규제에서 벗어난 해외건설특화펀드인 GIR(글로벌인프라펀드) 3호는 설립 후 첫 투자사업을 탐색하고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 정비 분야의 경우 이행실적이 가장 저조한 편이다. 안전처로 부터 편입되는 3종 시설물의 통합관리와 지하안전관리특별법, 경주 대지진 후속대책 등에 밀려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성능평가방식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종합·전문 감역 유연화의 경우 '업계 합의없는 제도개선은 갈등만 부추긴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업체 잇따라 적발

20명 불구속 입건... 4개월간 468차례나 불법으로 빌려줘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공공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종합건설업등록증을 건당 200만~300만원에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전문업체들이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업체 총책 김모(52)씨, 알선책 고모(58)씨, 건축주 김모(60)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고양시 장항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개월간 468차례에 걸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불법으로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고 3억2000여만원 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회사는 순이익으로 건당 약 70만 원을 챙겼고, 이들에게서 불법으로 등록증을 빌려 지은 공사 규모는 총 2500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동주택,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 등은 종합건설업등록증을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등록증이 없는 건설업자들은 200만~300만원을 주고 김씨 회사에서 건설업등록증을 빌려 전국에서 빌라 등을 지을 수 있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건설업을 할 목적이 아니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해 돈을 벌 목적으로 역시 다른 사람이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 세운 불법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이어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법인등기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대표폰과 차명계좌도 이용했다.

기술자들은 김씨 회사에 자신의 자격

증을 이용해 건설업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1개에 약 300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건축기사와 기계기능사 등 기술자 44명과 무등록 건설업자 464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공과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업등록증 불법 대여 전문업체 적발은 이달에도 있었다. 지난 10일에는 경기 김포경찰서가 건설사 80여곳에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줘 건설업등록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9억여원을 챙긴 브로커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격증을 빌려준 건설기술자 124명과 자격증을 빌린 84개 건설사 대표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